

◆ 政府 施策 ◆

工業基盤技術 108개 추가선정 — 향후 3년간 開發費 총 830억원 투입키로 —

상공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108개 과제를 93년도 공업기반기술 제3차 신규과제로 선정, 앞으로 3년간 총 830억원을 투입해 개발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우선 금년중 개발사업 참여기업에서 122억원을 부담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에서 158억원을 지원하는등 총 2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기술개발과제는 금년 상반기중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99개 기술과제에 대해 지난 9월 사업계획공모후 1천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상공부는 이번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평균지원액을 예년의 1억원보다 40%가 많은 1억 4천만원으로 책정, 업계의 기술개발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규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108개 과제의 기술분야별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분야가 '고속 및 초슬립형 다기능 PC통신용 모뎀개발(주관기관 : 연세대, 참여기업 : 대기정보통신)'등 15개 과제에 대해 총 68억원을 지원, 가장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화학분야는 '직물의 사행교정을 위한 자동포목 교정기 개발(주관기관 : 섬유기술진흥원, 참여기업 : 영시스템등 2개사)'등 24개 개발사업에 24억원이 지원된다.

기계·자동화분야는 '주조공정 자동화시스템기술개발(주관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업 : 현대산업기계등 4개사)'등 23개 개발사업에 23억원, 전기·전자분야는 '고주파용 무선마이크수신기 개발(주관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업 : 현대산업기계등 4개사)'등 23개 개발사업에 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금속·재료분야는 'NI강 용접재료의 국산화 개발(주관기관 : 포항공대, 참여기업 : 용재기술)' 등 23개 개발사업에 1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관기관별로는 기업주도 개발사업이 60개로 전체의 55%를 차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학참여사업은 39개로 전체의 36%, 정부출연연구소사업은 34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참여기업별로는 총 186개 기업중 158개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85%에 달하고 있고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은 66개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한편 상공부는 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액을 점진적으로 늘려 업계의 기술개발 부담을 경감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우선 내년도 개발자금지원규모를 올해의 900억원보다 60%가 증액된 14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93 공업기반 기술 3차 기술개발 과제 —

〈중전기기〉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업
Vacuum Interrupter제조용 Cu-Cr-Bi전극 제조기술개발	광명기전(주)	광명기전외 2개기업
Vacuum Interrupter제조용 AL2 O3 세라믹 절연통제조 기술개발	남성세라믹기술 연구소	남성세라믹, 남성테크
600KVA급 대형방폭형 건식변압기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신광전공, 삼진전기
비정질 변압기용 코아자장 열처리로 제조기술개발	한국공업로연구 조합	한양로공업, 장안종합열처리
에어콘용 BLDC Motor 개발	(주)성신 연구소	(주)성신

'94년 中企경영 · 생산기술지도 계획 확정

- 지도업체 KS工場審査등 면제 -

공진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94년도 중소기업 경영 및 생산현장 기술지도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공진청은 이 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동안 업계의 기술지도 신청을 받아 지도업체를 확정 한 후 기술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진청의 기술지도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로서 생산현장기반기술, 기계류부품 및 소재, 경영관리 및 품질경영, 공장혁신을 위한 공정기술등이며 지도기관은 공진청과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공업기술원등 40개 기관이다.

업체의 기술지도 신청은 각 지도기관에 비치된 기술지도신청서에 업체명, 지도과제, 지도기관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공진청은 신청업체의 지도요청 내용이 기술지도 대상분야에 적합하면 모두 기술지도 업체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진청은 기술지도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지도위원을 생산현장에 파견, 20일 정도 지도하게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공진청은 기술지도업체에 대해 각 지방 공업기술원의 제품 시험·분석 수수료와 교정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공장심사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등급자사정시 공장심사를 생략하는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工業發展基金 180억원 增額

— 電機部門 5億원 지원 —

정부는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등을 촉진키 위해 올해 공업발전기금 지원규모를 당초의 1985억원보다 180억원이 증가한 213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신발고유상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도 공업발전기금을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11월 20일 확정, 시행에 들어간 93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당초의 4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50억원을 확대했다.

또 보완공사가 시급한 대구염색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에 30억원을 추가로 지원, 올해 총 1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현재 OEM위주로 수출되고 있는 신발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키 위해 해외 전시장 개설과 광고활동비등 고유상표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해서도 공업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상표 해외시장개척자금은 연리 7%,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동일인융자한도는 제한이 없다.

또한 업계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키 위해 자체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제조업체에 대해 디자인기술 개발자금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개발자금의 부문별 조정액은 기계부문이 당초 225억원에서 300억원으로 75억원, 전자부문이 당초 115억원에서 155억원으로 40억원, 전기부문이 당초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5억원, 소재 및 디자인부문중 섬유소재가 당초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 제품 디자인이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에너지節約 시책 強化

— 商工部 20대과제選定 … 금융等 지원키로 —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에 총에너지 수요를 예상 정상수요보다 8.8% 줄이고 탄산가스배출량도 9.9%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34.8%였던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종의 비중을 97년까지 30.1%로 낮추고 경·소형차의 보급률을 92년의 2.6%에서 97년까지 16.5%로 높이며 家電기기의 절약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20대 과제를 선정, 절약시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신경제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약투자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되도록 에너지 가격구조를 수요관리 위주로 개편하고 절약투자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가격의 자유화폭을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겨 시장공급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체제로 개편하며 전기요금등 공익에너지가격을 결정할 때도 수요관리 요소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지원액을 연간 6천억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석유정제 및 에너지 물류체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질유분해 및 탈황설비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412Km인 송유관을 97년까지 1048Km로 늘려 절약형 유류수송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소를 92년 9개 공단에서 97년까지 20개 공단으로 확충하는 등 집단에너지의 보급확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업체 등 다양한 에너지소비 및 공급주체의 절약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전문기업등 민간에너지절약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APEC등 국제기구 및 주요선진국과의 공동기술개발 확대와 국내개발된 고효율 기자재의 수출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97년에 총에너지수요는 당초 예상했던 정상수요에 비해 8.8%, 전력최대 수요는 5.9%가 각각 낮아져 연평균 약 8억달러의 에너지수입이 절감되고 97년의 최대전력수요가 당초보다 189만KW가 적은 3044만KW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3천KW이하 소수력발전 설치허가 면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앞으로 3천KW 이하의 소수력 발전설비의 설치허가가 면제된다.

또한 ▲2천KW미만의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가 채용해야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실무경력이 전기기사 1급은 「1년 이상」으로 전기기사 2급은 「2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되고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는 범위가 「5백KW 미만」으로 역시 완화됐다.

그러나 업무용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피스텔등 일반업무시설은 「2천KW 이상」이면 전기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강화됐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모든 소수력발전소 설치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이 전기기사 1급은 3년, 전기기사 2급은 5년이였다. 또한 자가용발전설비의 대행범위는 1백KW 미만에 국한돼 왔다.

그러나 전기사용 1년전에 전기사용계획을 미리 한전에 통보해야 하는 용량은 5천KW 이상이었다.

상공자원부에서 이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케 된 배경은 국내 부존자원인 소수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채용을 쉽게함은 물론 대행범위를 넓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가용 발전설비용량의 대행범위를 현행 1백KW 미만에서 5백KW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5천7백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공장원부는 업무용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 그동안 5천KW 이상일 경우만 전기사용계획서를 제출하던 것을 일반업무 시설의 경우 2천KW 이상이면 한전에 신고토록 했다.

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 대상 과제 선정 - 2차 69개 과제 -

정부는 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 2차과제로 69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6월 1백 26개 과제가 선정, 현재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차사업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2차사업은 1차사업 실시결과 중소기업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돼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중소기업기술지원 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이번 2차사업의 규모는 70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사업비 13억 6천만원(정부 6억 8천만원) 기술개발 자금융자 지원요청 94억원, 시설·운전자금 융자 지원요청 1백 40억원이다.

이중 정부지원 6억 8천만원은 특정연구개발사업비중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운전자금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출연(연) 보유기술 무상양허 사업은 『신경제 계획』에 따라 경제활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노하우 등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기술지원비 지원과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운전자금을 융자알선하는 사업이며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技術드라이브 본격 추진 - 新經濟기술개발전략회의 지원책 마련 -

정부는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계적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대응해 업계의 技術開發 및 技術開發 投資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新경제 技術開發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기술개발 전략을 재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技術革新체제 구축을 지원키 위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마련을 통해 특히 民間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해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증가

지출금(2년 평균기준)의 25%에서 50%로 확대해 지출총액의 5%(중소기업 15%)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술·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30~50%(국산 50~70%)의 손비처리(감가상각)를 허용해 주는 한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수입금액의 3~4%)을 연구·개발업 및 농업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 財政 및 산업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기술금융회사 등 금융자금의 확충을 통해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민간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지원을 위해 연구원자격기준을 현재 학사이상에서 내년부터 전문대졸업자(중소기업)로 완화하고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개발 의무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구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상한인원을 올해 1744명에서 내년에는 2300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병역특례기관 지정요건을 석사이상 5명 확보에서 3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 關稅率 평균 7.9%로 인하 — 財務部, 關稅率 인하여시제따라 1%P 인하 —

관세율인하 예시제(2차 89~94년)에 따라 輸入관세율이 금년 평균 8.9%에서 내년에는 7.9%로 인하된다.

정부는 관세율 인하여시제가 이로써 끝남에 따라 내년에 대대적인 세율개편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財務部에 따르면 내년도에 세율이 인하될 품목은 총 2720품목(세목기준, HS4-10단위)중 공산품 176개와 농산물 158개등 334개 据置품목을 제외한 2386개다.

가장 많은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 즉 중심세율은 8%로 금년 9%에서 1%포인트 내리고 전품목의 평균세율은 금년 8.9%에서 7.9%로 역시 1%포인트가 내린다.

내년 평균세율인하폭을 분야별로 보면 농산물은 16.6%로 올해(17.8%)보다 1.2%가 내리고 공산품은 금년 7.1%에서 6.2%로 0.9%포인트 인하된다.

내년도 공산품의 평균수입관세를 가공도 기준으로 세분하면 원료 2.8%, 중간재 7%, 완제품 7.1%등으로 중간재와 완제품의 세율격차가 거의 없어서 균등관세율체계(U.T.S:Uniform Tariff System)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내년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의 관세율은 대체로 ▲비경쟁 원료류는 1~2% ▲경쟁원료류 3% ▲중간재 8%(국내생산부족품 또는 경쟁력 확립요구 품목은 5%) ▲완제품 8%(소비재 포함) ▲농산물 별도세율등의 원칙이 적용돼 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7.9%로 인하됨에 따라 미국(88년 기준 6.1%)·일본(4.6%)·EC(6.7%)·대만(9.5%)등 선진국 또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됐다.

정부는 내년 세율개편을 통해 가공도별 세율격차 확대와 종량세 도입뿐만 아니라 사치성 소비재 및 수입급증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UR/관세양허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準備金 還入기간 3년으로 統合단축 — 財務部, 租減法개정 내년 시행키로 —

特別償却과 함께 기업에 대한 間接稅制지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準備金의 이용기간이 내년 부터 일제히 단축된다.

이에따라 설비투자(중소기업)·기술개발·수출 및 시장개척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혜택이 사실상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제지원상 준비금은 앞으로 발행할 비용(투자)에 대비해 소득금액의 일부를 미리 損金으로 산입한 후 일정기간후 환입시키는 것으로 기업에게 세액을 無利子로 용자해 주는 효과가 있어 이용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정부는 그러나 同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기술개발·수출손실·시장개척·해외

투자·공장지방이전·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대한 각종 준비금의 이용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준비금의 이용기간은 지원분야별로 거치기간이 최장 5년까지, 분할환입기간은 4년까지 다기화돼 있으나 3년거치 3년분할환입으로 통일하는 한편 이 기준보다 짧은 준비금은 현행기간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설비투자·기술개발·공장 및 본사지방이전·농어촌소득개발원 사업·광업투자 등으로 損金산입한 준비금의 환입기간은 4년거치 3년분할상환에서 3년거치 3년분할로 단축된다.

특히 수출손실 및 해외시장개척(특별:대부분 수출이 해당)해외사업·사회간접자본투자등의 경우 현재 5년거치 3년분할환입에서 3년거치 3년분할로 단축돼 업계의 세제혜택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됐다.

◆ 準備金제도 개편현황

① 3년거치 3년분할 환입으로 조정

구 분	현 행
- 중소기업 투자	4년거치 3년
- 기술개발	4년거치 3년
- 수출손실 (특별)	5년거치 3년
- 해외시장개척 (특별)	5년거치 3년
- 해외사업손실	5년거치 3년
- 해외투자손실	3년거치 4년
- 공장지방이전	4년거치 3년
- 본사지방이전	4년거치 3년
- 농어촌소득원개발	4년거치 3년
- 광업투자	4년거치 3년
- 사회간접자본투자	5년거치 3년
- 수도권외 투자기업	4년거치 3년

② 현행유지

구 분	현 행
- 에너지절약투자	2년거치 일시
- 투융자손실준비	4년거치 일시
-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회수시정일시
- 수출손실(일반)	2년거치 3년
- 해외시장개척(일반)	2년거치 3년

工團부담금 引下・減免 － 企劃院 農地전용・山林전용・開發부담금등 경감 －

정부는 工團조성시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 각종 工團부담금을 인하 또는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기업의 공업지역 用地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공업지역의 建蔽率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상품의 질적수준 향상과 경쟁축진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고발에 따른 試驗・檢査비용을 불량품발생시 해당제품 제조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나무제조업의 基準공장면적률을 완화해 일반제재업 및 합판 및 나무관련 제조업에 대해 현행 20~30%에 달하고 있는 기준면적률 낮추기로 했다.

이는 원목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야적장의 空地면적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현행의 기준공장면적률을 달성치 못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어업면허제도를 개선, 어장환경변화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중에 복합양식이 가능한 적정품종 선정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1양식장에 1품목만 양식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동일어장내에서 2품종 이상의 복합양식을 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工團조성시 부담금이 분양용지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입주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현행 100분의 60이하로 낮게 책정돼 있는 공업지역내 건폐율을 내년 상반기중 건축법 개정시 공업지역 건폐율을 높여 입주기업의 용지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